

제241호 (2010. 1. 11)

■ 건설 경기

- 2009년 11월 국내 건설수주 14.4조원 기록

■ 정책·경영

- 201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동향과 전망
- 한-EU FTA,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소극적

■ 정보 마당

- 호주 공공공사의 적정 노무비 확보 비결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턴키공사 낙찰률의 진실

2009년 11월 국내 건설수주 14.4조원 기록

- 작년 최대 월간 실적, 1~11월 누적액 전년 동기비 플러스로 전환 -

■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높은 호조세

- 2009년 11월 국내 건설수주가 공공과 민간 모두 높은 호조세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77.0%가 급등한 14조 4,245억원을 기록.
 - 이는 작년 월간 실적으로는 최대 금액으로, 1~11월 수주 누적치도 전년 동기비 증가세(+7.5%)로 전환됨.
- 공공 부문에서는 보금자리주택과 철도 수주 증가의 영향으로 건축과 토목 모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 대비 64.6% 증가한 5조 822억원의 수주 실적 시현
 - 공공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00.6% 급등한 3조 6,687억원을 기록.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으로 인하여 2조원 이상의 철도수주가 발생함.
 - 공공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비 13.0% 증가한 1조 4,132억원임. 보금자리주택 수주 영향으로 공공 주택수주가 1조 916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월 수주액으로는 최대치임.
- 민간 부문은 경기도 지역 신규 주택수주 증가와 초고층빌딩 수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월별 실적으로는 가장 큰 수주액인 8조 7,658억원(+85.6%)을 기록함.
 - 민간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49.6% 감소한 5,506억원에 그친 반면, 민간 건축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26.3%가 급등한 8조 2,103억원으로 높은 호조세를 보임.
 - 민간 주택수주는 경기도 지역에서의 1만 2천호 이상 신규 주택수주와 1조원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 수주 실적에 힘입어 지난해 들어 가장 높은 수주액인 4조 4,779억원을 기록

〈2009년 11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8. 11월	8,151.0	3,088.0	1,829.2	1,250.5	802.4	448.1	4,722.1	1,093.4	3,627.7	3,317.3	310.4
2009. 11월	14,424.5	5,082.2	3,668.7	1,413.2	1,091.6	321.5	8,765.8	550.6	8,210.3	4,477.9	3,732.4
증감률	77.0	64.6	100.6	13.0	36.0	-28.2	85.6	-49.6	126.3	35.0	1,102.5
2008. 1~11월	80,441.9	23,684.5	12,501.5	11,130.7	6,944.8	4,185.8	52,590.8	10,843.4	41,691.1	27,772.3	13,918.9
2009. 1~11월	86,510.2	44,343.2	33,769.5	10,552.9	6,610.3	3,942.6	39,277.8	5,723.7	33,518.0	21,995.3	11,522.7
증감률	7.5	87.2	170.1	-5.2	-4.8	-5.8	-25.3	-47.2	-19.6	-20.8	-17.2

자료 : 통계청

- 비주택 수주 또한 3조 7,324억원으로 지난해 최대치를 갱신함. 최근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공장 및 사무실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사업비가 2조원에 151층 규모인 인천타워 건축공사 계약이 수주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 ‘사무실 및 점포’ 및 ‘철도 및 궤도’ 역대 최대 수주액 갱신

- 세부 공종별로는 건축수주가 모든 공종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주택’ 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호조세를 보여 전년 동월비 35.2% 증가한 5조 5,696 억원으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5조원 이상의 수주액 시현
 - ‘사무실 및 점포’ 수주액은 2조 9,933억원으로, 이는 통계 작성(1976년) 이래 최대치임.
 - ‘공장 및 창고’와 ‘관공서’ 수주도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7.9%, 29.1% 증가함.
- 토목수주의 경우 ‘철도’, ‘치산치수’, ‘상하수도’ 부문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도로’, ‘토지 조성’, ‘기계설치’ 수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도로 및 교량’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60.5% 감소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 까지 1년간 지속된 증가세를 마감
 - ‘철도 및 궤도’ 수주의 경우 호남고속철도와 경기도 복선전철 관련 영향으로 통계 작성 이래 월간 수주액으로는 가장 높은 2조 1,078억원을 기록함.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61.9%가 급등한 수치임.
 - ‘치산치수’ 수주는 작년 10월(2.4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평년치 이상인 5,100억 원의 높은 금액을 나타냄.
 - ‘상하수도’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16.8%가 증가한 2,922억원을 기록함.
 - ‘토지조성’ 수주와 ‘기계설치’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7.2%, 31.1% 감소함.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및 교량	철도 및 궤도	치산치수	토지조성	상하수도	기계설치
2009. 11	5,569.6	2,993.3	617.3	320.9	138.2	501.8	2,107.8	511.0	164.5	292.2	761.0
증감률	35.2	1063.6	247.9	29.1	45.8	-60.5	661.9	6,799.5	-47.2	216.8	-31.1
2009. 1~11월	28,889.9	7,717.3	2,932.0	3,617.4	1,701.4	12,169.7	8,191.0	4,806.2	4,131.2	1,168.6	5,604.8
증감률	-17.4	-13.6	-41.6	-1.5	-15.5	114.4	566.0	1,716.1	-18.4	-22.6	-27.7

자료 : 통계청

박철한(연구원.igata99@cerik.re.kr)

2010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동향과 전망

- 한시적 양도세 감면 종료 등 악재 많아, 시장 회복정책의 완급 조절 필요 -

■ 경기 침체 영향으로 위축된 부동산시장

- 금융 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동산시장은 정책 당국의 금융규제(DTI, LTV)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무산, 각종 부동산 세제 혜택의 종료 임박 등으로 2010년의 출발이 다소 무거운 편임.
-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의 주된 원인인 미분양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돼 오던 양도세 감면 등 각종 한시적 세제 혜택 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향후 수요 감소 및 공급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미분양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 2009년 2월에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해오고 있음.
 - 현재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전용 149㎡이하)은 60%,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매매계약 체결시 양도세 100% 면제 혜택을 받고 있음.
- 한시적 효력이 부여되었던 까닭에 이와 같은 혜택은 2010년 2월 11일에 종료
 -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기존 혜택이 유지되며, 나머지 부분은 기본세율(6~35%)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의 완화 종료

- 2009년 3.16 세제 개편으로 같은 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규정의 완화조치는 2010년 12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 2010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 내에서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해서 최고

45% 세율로 과세함.

- 2011년 이후에는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0% 과세로 환원

■ 취득등록세 추가 감면 혜택 종료

- 지방 미분양 아파트 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6.11대책을 통해 지방 비투기 지역 소재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취·등록세를 추가로 50% 감면해주었던 것을 미분양 심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2.12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역까지로 확대한 것임.
- 전국 미분양주택(2009년 2월 12일 기준) 대상으로 사·도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 등기)하는 경우에 한정
- 2010년 7월 1일부터는 현행 1.1~1.75%에서 국민주택규모 기준으로 2.2~2.7%로 환원

■ 향후 전망

- 부동산세제 혜택 종료 외에도 제2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접수가 상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위축된 민간공급부문은 더욱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주택업계의 현안으로 되어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2010년 1/4분기까지라도 긍정적으로 처리된다면 분양시장 침체 가속화를 막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현재 부동산시장의 거래 위축에 가장 큰 위력을 보이고 있는 DTI 등 금융규제가 국내 경기 회복에 맞추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행과 병행될 경우에는 수요 위축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큼.
-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부동산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완급 조절 및 지역별 상황에 부응하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두성규(연구위원·skdoo@cerik.re.kr)

한-EU FTA,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소극적

- 합작지점 개설·자회사 설립 등 현지화전략으로 진출 모색해야 -

■ 한-미 FTA에 비해 공공건설시장 개방에 소극적

- 한-EU FTA상의 공공건설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요소들은 이미 개방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의미를 갖지 못함.
- 공급자 자격 요건 중 과거 실적에 지리적 제한을 가할 수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의 양허하한선을 500만SDR 대신 1,500만SDR로 하는 등 개방에 부정적임.
- 공공건설시장과 관련한 내용은 ① 일반 정부조달과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관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 정부 조달 관련

- 조문협상에서는 정부조달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WTO GPA)의 절차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협상의 결론이 맺어졌음.
 - 다만, 입찰참가자의 자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과거실적을 요구할 경우 WTO GPA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발주국 내의 실적뿐만 아니라 발주국 외 실적을 동등하게 감안하는 원칙을 인정.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거 실적에 지리적인 제약을 두어 발주국 내로 한정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 양허협상은 WTO GPA에서 양허된 것을 준용함으로써 한-EU FTA로 인한 직접적인 추가 개방은 없음. 단, 현재 진행 중인 WTO GPA 개정협상의 결과 양측의 WTO GPA 양허내용이 변할 경우, 동 변경 내용이 자동적으로 FTA에 반영되도록 규정

■ 민자 사업 관련

- 민자사업을 정부조달의 일부로 인식하여 공공조달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EU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민자사업을 정부조달과 별도로 취급하여 정부계약법이 아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규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FTA에서 민자사업을 양허대상으로 삼기위해서는 별도로 대상을 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음.
-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 규정한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Build-Operate-Transfer, BOT)’을, EU는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04/18/EC)에서 규정한 ‘공공사업실시협약(Public Works Concessions)’을 민자사업 부문의 양허대상으로 규정했음.
- 이 밖에 민자사업 관련 조문협상에서는 FTA가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비차별 의무와 투명성 관련 일부 절차적 의무(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포함한 입찰 및 낙찰 공고, 이의 신청절차)만을 규정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및 사업시행 절차는 국내법을 적용토록 했음.
- 이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중소건설업자보호제도의 적용 가능
- 민자사업의 양허범위는 1,500만 SDR(222억원) 이상의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경기도 등)가 발주하는 사업임.
- 그러나 민간투자법에서 외국기관과 외국인의 투자를 이미 허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방 효과는 없음.
- EU는 회원국 중앙정부와 모든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민자사업이 양허대상으로 포함됐음.

■ 동유럽시장 성장잠재력 커...현지화전략으로 진출 모색해야

- 2004년 이후 가입한 동유럽 회원국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EU 공공건설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임.
- 현지화 전략 : 주재 사무소 설립, 지점 개설, 합작, 장기협력관계 유지, 자회사 설립, EU회사의 인수합병 등
- 현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 : 정부와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현지 발주기관 및 건설 관련 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국에서의 조달 및 건설 제도 변화, 해당국 발주기관 및 해당국 소재 국제기관의 발주 정보 등 확보
- 현지 업체 현황 분석 및 관련 법률 사항 숙지 : 지역별, 공종별로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 현황 정보를 입수·분석할 필요가 있음.

빈재익(연구위원:jipin@cerik.re.kr)

호주 공공공사의 적정 노무비 확보 비결

- Award 시스템으로 적정공사비 확보 여건 조성, 건설산업 전체의 Safety net 역할 -

■ 호주 공공공사 90%의 높은 낙찰률 시현, 100% 이상도 가능

- 공공공사 낙찰률은 대체로 90% 수준임. 100% 이상의 낙찰률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발주 금액의 90% 이하로 입찰 금액을 제시한 업체 중 낮은 가격 순으로 고르되, 제시한 낮은 가격으로도 시공이 가능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 공공 발주자건설협회·건설업자건설노조 등 관련 당사자가 한 목소리로 쫓는 높은 낙찰률의 비결은 Award 시스템의 적용임.

■ Award 시스템의 개요

- Award는 공정하고 적절한 최저 안전망(minimum safety net)을 의미하는 직종별 임금의 최저 기준으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됨.
 - Award는 정부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여 결정한 지역별 직종별 최저임금임. 연방 정부주정부시 차원에서 각각의 Award가 존재함.
 - 공공발주자는 Award에 명시된 임금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야 하고 사업주는 Award에 명시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Award에 의한 임금 지불을 위반할 경우 건설업체에게 벌금(penalty)을 부과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공공공사 참여업체 명단(public work list)에서 당해 업체를 배제시킴.
 - public work list란 정부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체의 리스트임. 3회의 합리적인 컴플레인¹⁾이 제기될 경우 당해 건설업체를 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음.
 - Award 위반은 합리적인 컴플레인¹⁾으로 인정되는 사안임. 이것이 건설업체로 하여금 반드시 Award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임.
 - 호주 건설업체 담당자에 의하면 공공공사에서의 Award 임금 지불은 철칙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함.

* 호주 현지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자료를 정리한 내용임.

■ 건설업 Award 시스템의 도입 취지와 시기

- 수주 생산인 건설업에서 가격 경쟁을 방지할 경우 공사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경향이 있었음. 가장 취약한 노무비 삭감 경쟁을 막기 위해 건설업의 Award가 도입되었음.
 -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경험을 통해 과도한 저가 낙찰이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 그리고 산업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함.
- 건설 분야에서는 1920년대에 연방 차원에서의 Award가 시작됨.
 - 연방 차원의 Award와 주 차원의 Award가 상충될 경우에는 연방 차원의 Award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 차원의 Award가 보완적으로 적용됨.

■ 건설산업에서의 Award 도입 효과

- Award는 건설산업에서 최저한의 ‘Safety Net’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Award의 도입으로 ‘생산물의 품질 측면’과 ‘산업안전 측면’에서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노무비 삭감과 무리한 공기 단축을 막아주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있음.
- Award의 직접적인 효과는 노무비의 연쇄적인 삭감을 억제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낙찰을 막아준다는 데 있음.
 - 호주 상공부 산하 Fair Trading에서는 상세한 품셈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 공공 발주자는 입찰 심사 과정에서 품셈과 Award에서 규정한 임금의 계상 여부를 검증함.
 - Award가 없다면 과당경쟁에 의하여 낙찰률이 과도하게 낮아지게 됨. 이때 가장 큰 부담은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져야 하고, 그 피해는 발주자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음.
 - 결국 Award는 근로자 보호에서 나아가 건설업체와 건설산업 전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셈임.
-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함. Award에 의한 가격경쟁에 한계가 있으므로 숙련된 슈퍼바이저를 고용해 작업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기를 단축해야 함.
 - 또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의 개발, 우수 자재의 저렴한 조달, 간접비용의 절감 등이 또 다른 경쟁 요소임.

심규범(연구위원·gbshim@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6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정책과 주최 'EWS지표점검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시장 EWS지표에 대한 자문 및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 점검에 대한 자문 수행

■ 발간물 정보

발간물명	주요 내용
월간지 CERIK 저널 (1월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경기동향 : 부동산경기 / 건설경기 ■특집 : [창조적 융합의 시대 - 건설이 이끈다] 건설산업 비전, 인문학으로 통찰하라 ■이슈진단 : 두바이 모라토리엄 선언의 영향과 시사점 2010년, 입낙찰제도의 새로운 지평 열어야 ■경영정보 : EU의 새로운 출발과 세계 정치 경제 질서 해외건설-수주 호황에 걸맞는 내실 다질 때 2010년 건설업 환경과 건설기업 경영 전략 ■연구노트 : 공정 혁신을 통한 대형 건설기업의 ECCM화 추진전략 ■건설상품 100선 : 인천대교 - 첨단으로 진화하는 교량 건설 기술의 전시장

■ 중남미 건설시장 관련 원내 세미나 개최

- 개최 일자 : 2010년 1월 6일(화)
- 주제 : '남미 및 파라과이 건설산업과 시장 특성'
- 전진구 파라과이 아순시온 국립대학 교수를 초청해 중남미 건설산업 현황 및 건설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한국 건설업체들의 진출 활성화 방안 등 토론

■ 연구원·서울대 공동 '제7기 건설산업 최고전략과정(ACPMP)' 모집 안내

- 입학자격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부이사관급 이상/건설업체 CEO 및 임원, 건설유관단체와 기관 경영간부, 지방 건설업 지도급 인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경영간부와 집행최고책임자 등
- 교육기간 : 2010. 3. 23(화) ~ 11. 23(화) 8개월간
- 교육시간 : 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9시30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 18(월) ~ 2. 19(금)
-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서울대 ACPMP 사무국(<http://acmp.snu.ac.kr>) 02-882-2623/4320
한국건설산업연구원(<http://www.cerik.re.kr>) 02-3441-0806

턴키공사 낙찰률의 진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턴키 방식으로 발주되어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가격’과 ‘성능’ 가운데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다.

최저가낙찰제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입찰가격만으로 시공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건설업체가 일괄 수행하고, 시공사 선정시 입찰가격과 설계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턴키방식은 발주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주자 예산에 근접하는 규모나 물량으로 설계가 이뤄진다. 발주자가 100억원 규모 공사를 예상하고 있는데, 50억원짜리 설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물의 성능이 향상되는 대신 낙찰률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또,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 경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턴키방식은 새로운 기술과 공법의 경연장이 되며 건설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다만 공사비가 상승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턴키공사 낙찰률이 상승하는 것은 물가변동이나 시공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한 리스크 비용이 입찰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턴키방식은 말 그대로 모든 공사를 시공사 책임하에 완료해 키(key)를 넘겨주는(turn) 방식이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최저가 방식은 설계가 누락되거나 자재가격이 상승하면 설계변경을 통해 시공자가 손실을 보전받기 쉽지만 턴키방식은 발주자의 귀책이 없는 한 모든 책임이 원칙적으로 시공사에게 부과된다는 애기다.

최저가낙찰제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덤핑 입찰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그 피해는 하도급업체나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된다. 이런 폐해를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최저가 방식을 축소하고,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는 입찰 방식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턴키방식은 기술 경쟁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합하다. 4대강 사업의 경우 단순 준설작업이 많은 구간은 최저가 방식으로, 수중보 등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곳은 턴키발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턴키방식은 하나의 건설업체 혹은 컨소시엄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게 돼 계약관계나 하자 처리 등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공기단축 효과도 인정된다. 중소기업이 참여할 경우 공사 과정에서 기술을 이전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다만 턴키공사 발주시 입찰자가 소수라는 점, 설계심의 과정의 잡음 등의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4대강 턴키발주를 단순히 예산 낭비라고 보는 것은 편향된 시각이다. <머니투데이, 2009. 12 >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